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핵심 기조로 에너지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단계적 축소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과 비교할 때 그 기조는 유사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는 현실에서도 에너지 공급측면에 정책이 집중된 경향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전환정책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공급측면과 에너지효율 향상이라는 수요측면의 정책을 고루 채택하면서도 ‘에너지효율 우선정책(Efficiency First)’을 표방하며 후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추세에 있다. 에너지효율 최우선은 에너지전환정책의 상위(high-level)의 원칙으로서, 에너지, 기후 및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U는 2016년에 청정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8개의 입법안으로 구성된 청정에너지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에너지효율 최우선을 정책순위의 가장 상위에 두고 있다. 독일 또한 최근 발표한 ‘에너지효율 그린페이퍼(Green Paper on Energy Efficiency)’에서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을 선도하는 원칙으로 에너지효율 최우선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달성한 선진국형의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를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 실현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의 틀에서 보면 비로소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의 역할이 부각되었으며,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이 균형을 이뤄 정책 믹스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같은 공급측면의 정책은 그 성과가 보급 통계나 설치된 설비들을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관심과 추진의 동력이 지속될 여지가 높다. 반면,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 정책의 경우 이를 가시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추진 동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규제 강화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규제는 국민과 이해당사자에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전략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비용 분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본 에너지포커스 2019 가을호의 이슈와 시선 섹션은 이번에 발표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주제로 구성하였다.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 분야 전문가와 전략 수립에 직접 참여한 담당자로부터 본 전략의 의의, 각 부문별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그리고 전략의 성공을 위한 제언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